

글로벌 디지털 산업 · 정책 주간 동향

Global Digital Industry & Policy Weekly Trends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CONTENTS

- 트럼프 대통령, '디지털세 도입국 추가 관세' 위협 전 메타 CEO와 회동
- EU, 디지털 규제 두고 미국에 강경 대응 방침 밝히며 공방 지속
- 콜롬비아, 애플의 앱 마켓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
- 미국 법원,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데이터 공유' 제재 결정
- EU, 광고 시장 독점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부과...트럼프는 무역 보복 위협
- 애플, 브라질 앱스토어 운영 성과 강조
- 미국 항소법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 요청 기각
- 프랑스, 이용자 동의 없이 쿠키 설정한 쉬안-구글 제재
-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착취' 규제 강화 방침
- 미국 법무부, AI 경쟁 촉진 위해 반독점법 집행 강화 방침
- 브라질 정부, 새로운 빅테크 반독점법 제안
- 중국,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단

트럼프 대통령, '디지털세 도입국 추가 관세' 위협 전 메타 CEO와 회동

-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게시물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한 것과 관련해 메타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CEO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저커버그 CEO는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디지털세를 비롯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전 세계 국가들의 디지털 규제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이러한 만남이 이뤄지고 불과 수일 후인 '25년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상당한(substantial)"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
- 그러자 저커버그 CEO가 전 세계 각국의 디지털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며 확산
-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백악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메타의 대변인은 저커버그 CEO가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내 인프라 투자와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설명
- 한편, 광고 의존형 수익 모델을 가진 메타는 디지털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빅테크 중 한 곳이며,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EU 등지에서 강력한 규제 압박에 직면*

* 대표적인 예로 '25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저커버그 CEO와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 저커버그 CEO는 친(親)트럼프 행보를 보였고 최근에는 전 세계 빅테크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력과 지지를 요청

- 저커버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트럼프는 메타의 소셜미디어가 보수적인 발언을 검열한다고 주장하며 대립
- 특히 '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2년간 정지시키며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름
-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 이후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직접 찾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등 트럼프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저커버그 CEO의 이러한 행보는 빅테크에 우호적인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외국의 규제 압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빅테크 반규제 노선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저커버그 메타 CEO와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앙숙이었으나, 저커버그 CEO는 디지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빅테크 반규제 노선에서 협력하는 양상

[출처]

- Tech in Asia, "Meta CEO urges Trump on digital taxes before tariff threat", 25.8.29.

EU, 디지털 규제 두고 미국에 강경 대응 방침 밝히며 공방 지속

- EU와 미국이 '25년 7월 체결한 무역 합의를 반영한 공동성명('25.8.21.)을 발표한지 수일 만에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며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대두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세 도입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위협 발언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EC) 및 회원국 주요 관료들이 미국의 압력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

- '25년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SNS 계정에서 디지털세 및 관련 규제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반대로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에는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하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술기업의 운영에 규제 제한을 두는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발언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시행하는 유럽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
- 이에 대해 EC 대변인인 파울라 피뉴(Paula Pinho)는 "EU는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DMA와 DSA에 대한 문제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청정·공정·경쟁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매체 인터뷰에서 "유럽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25년 8월 27일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e Sejourne)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역시 "미국이 실제로 디지털 규제에 대한 보복에 나선다면 무역 합의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발표
- 이에 더해 '25년 8월 29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금과 규제 문제는 각국 의회와 유럽 의회의 소관"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EU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EU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

▶ '25년 8월 21일 발표된 EU와 미국의 무역 합의 후속 조치를 담은 공동성명에는 EU의 디지털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빠진 상태로, 향후 양측 간 무역 합의 추가 협상 및 조정에 난항이 예상

- 미국 정부는 EU와의 무역 합의 협상 과정에서 DMA와 DSA가 미국 기술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
- 그러나 EU는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EC 및 회원국 고위 관료들이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EC가 디지털 규제에서 미국에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

•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EU의 힘겨루기는 EU와 유사한 플랫폼 규제를 검토 중인 국내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출처]

- eunews, "Trump threatens countries over digital regulations; EU fires back: We decide our own rules", 25.8.26.
- fudzilla, "EU antitrust boss warns Trump not to mess with tech laws", 25.8.28.

콜롬비아, 애플의 앱 마켓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

- 콜롬비아 산업통상부(SIC)가 애플의 대체 앱스토어 제한, 인앱결제 강제 및 높은 수수료 부과 등 반경쟁적인 앱 마켓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

▶ SIC는 '25년 8월 19일자 결의안(제60099호)을 통해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제한하고, 인앱결제와 높은 수수료를 강제하며 반경쟁적 관행이 관여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

- **(대체 앱스토어 제한)** SIC는 애플이 개발자들로 하여금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대체 앱 스토어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을 계약상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소프트웨어 배포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
- SIC는 이러한 제약이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고 애플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해당 계약 조항이 콜롬비아 법률상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
- **(인앱결제 강제 및 높은 수수료)** 또한 SIC는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애플의 독점적인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에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이 앱 외부의 더 저렴한 대안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 SIC는 그 결과 콜롬비아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신규 개발자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

▶ SIC는 애플의 행위가 콜롬비아 경쟁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조사를 진행할 예정

- 조사는 증거 수집 및 콜롬비아 내에서 애플의 행위에 대한 분석 등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조사를 통해 애플의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SIC는 애플에 시정 조치, 과징금, 사업 관행 변경 명령 등 제재를 부과하게 될 전망
- 다만 현재로서는 조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SIC가 애플의 법 위반을 확정하더라도 애플은 관련 혐의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
- 한편, 일각에서는 애플이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거나 대체 앱 유통 및 지불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

- EU, 미국, 아시아에서 애플의 앱 마켓 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콜롬비아도 새로이 이들 국가의 행렬에 동참하며 애플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

[출처]

- Access Partnership, “Colombia’s Competition Authority Opens Investigation into Apple’s App Store Practices”, 25.8.28.
- MacRumors, “Apple’s App Store Under Investigation in Colombia”, 25.8.28.

미국 법원,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데이터 공유' 제재 결정

-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에 대한 제재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매각 대신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명령

- ▶ '25년 9월 2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구제책 결정에서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매각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
 - 다만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로 하여금 일정 자격을 갖춘 경쟁사에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구글플레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크롬, 구글 서치,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앱 등의 사전 설치를 요구하는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
 - 동 소송과 관련해 '24년 8월 메흐타 판사는 검색 사업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며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음을 인정
 - 이후 구글에 대한 구제책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이어진 가운데, 동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는 크롬 매각 강제와 같은 강력한 구제책을 요구해왔던 상황
 - 그러나 판사는 동 소송이 처음 제기되었던 '20년과 달리 현재는 "AI 기술 발전이 이미 검색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크롬 매각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
 - 또한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구글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하는 수익 공유 계약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구글의 지급을 전면 금지할 경우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다"고 설명
- ▶ 구글은 이번 판결이 AI로 인해 기술 산업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으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시 사용자와 개인정보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 구글은 현재 법원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미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구제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반경쟁적인 전술을 생성AI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추가 구제책을 모색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 메타는 "생성AI 도구의 등장으로 이번 사건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분석하면서,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이 생성AI 분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구제책의 핵심"이라고 지적

•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은 항소 진행 시 최종 판결까지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지만, 구글은 1심에서 크롬 매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면서 일단은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

[출처]

- CNN, "Google will not be forced to sell off Chrome or Android, judge rules in landmark antitrust ruling", 25.9.3.

EU, 광고 시장 독점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부과...트럼프는 무역 보복 위협

- EU 집행위원회(EC)가 광고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한 구글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며 EU에 대한 무역 보복 가능성을 언급

▶ '25년 9월 5일 EC는 광고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경쟁을 왜곡하고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29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구글은 광고 기술 업계가 제공하는 주요 디지털 도구들에서 모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EC는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 구매 도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들 시장에서 자사의 'AdX'를 우대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

* ▲퍼블리셔가 웹사이트·앱의 광고 공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퍼블리셔 광고 서버(구글의 'DFP(DoubleClick For Publishers)') ▲광고주가 자동화된 광고 캠페인 관리에 사용하는 오픈웹용 프로그래밍택 광고 구매 도구(구글의 'Google Ads'와 'DV 360') ▲광고 공간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광고 교환소(구글의 'AdX')

** 예로 구글은 Google Ads와 DV 360를 통해 광고 교환소에 입찰할 때 다른 경쟁 광고 교환소를 피하고 AdX를 선호함으로써 AdX가 가장 매력적인 광고 교환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EC는 지난 4년간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 남용을 조사한 후 이 같이 판단하고 구글에 대해 ▲자사 우대 행위를 중단하고 ▲광고 기술 공급망 전반에 걸쳐 내재된 이해 충돌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면서, 향후 60일 이내 시정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
- EC는 이미 구글이 자사 광고 기술 사업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내재된 이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예비 견해를 밝히기는 했으나, 우선은 구글에 직접 제안을 요청하고 향후 구글이 제안한 조치에 대해 평가한 후 적절한 구제 조치를 채택할 계획
- 구글은 즉각 "자사 서비스에 대한 대안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고 반발하면서 항소 의사를 발표
- 한편, EC는 당초 '25년 9월 1일 구글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미국과의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실제로 인하하기를 기다리면서 제재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짐

▶ EC의 구글 제재 결정이 알려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EC를 비판하면서, EU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

- 트럼프 대통령은 EC의 결정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면서, "미국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한 벌금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

*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EU는 구글 제재 결정으로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미국과의 무역 합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양국 관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전망

[출처]

- Politico, "The EU fined Google and Trump threatened to retaliate. Now what?", 25.9.8.
- CNN, "Trump threatens EU with tariff investigation after Google hit with \$3.45 billion antitrust fine", 25.9.6.

애플, 브라질 앱스토어 운영 성과 강조

- 브라질에서 앱스토어 규제 압력에 직면한 애플이 브라질 내 앱스토어 운영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

▶ '25년 9월 4일 애플은 '24년 한 해 동안 브라질에서의 앱스토어 운영 성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

- 그에 따르면, '24년 브라질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은 iOS 앱을 통해 638억 헤알(미화 11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창출했고, 이 중 90%는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불없이 발생해 브라질 개발자 중 대다수가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브라질에서 개발된 앱은 전 세계적으로 5억 7,000만 건 다운로드되었고, 이 중 53%는 브라질 외부 사용자로부터 발생
- 브라질 사용자들은 총 15억 개 앱을 다운로드했고, 앱스토어 주간 방문건수는 2,550만 회를 기록
- 또한 브라질에서는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Apple Developer Academy)*' 10개소가 운영되었고, '24년 '올해의 아이패드 앱'으로 선정된 '모이세스(Moises)**' 앱 등 브라질 국내 앱은 국제적으로도 크게 성공
- * 앱 개발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자(러너)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 뮤지션을 위한 AI 기반 보컬 제거 앱
- 애플은 이러한 성과-사례를 제시하며 앱스토어가 폐쇄적 환경이 아닌, 글로벌 성장을 위한 발판임을 강조

▶ 한편, 애플은 현재 브라질 경쟁당국(CADE)으로부터 앱스토어 외의 경로를 통한 앱 다운로드(사이드로딩) 및 대체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 압력에 직면

- 지난 '22년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Libre) 등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 디지털 서비스 판매를 제한하고, 자사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유도 제한(anti-steering)' 조항으로 iOS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CADE에 불만을 제기
- CADE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5년 7월 1일 애플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관 내 행정법원에 애플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
- 애플은 오는 '25년 10월까지 iOS에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대체 결제를 허용해야 할 전망으로, 이와 관련해 애플은 CADE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협력 중
- CADE 내에서 제재 관련 결정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은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검토 중으로, 향후 애플에 대한 과징금 및 구제 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

• 애플이 브라질 앱스토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브라질 개발자들의 성공 사례를 부각해 자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

[출처]

- 9toMac, "Apple highlights Brazilian study on domestic App Store performance", 25.9.4.

미국 항소법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 요청 기각

-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구글 앱 마켓 반독점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구글에 내린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구글 측 요청을 기각

▶ '25년 9월 12일 항소법원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 요청을 기각하고, 구글이 법원의 금지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

- 지난 '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앱 마켓 반독점 소송에서 '23년 12월 배심원단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고, 이어서 '24년 10월 연방법원은 구글에 플레이스토어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명령*

* ▲경쟁사에 자사 앱 마켓 개방 ▲인앱결제 강제 금지 ▲불법적인 수익공유 계약 중단 등

- 구글은 곧바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5년 7월 항소법원은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강화해왔음을 인정하며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명령을 인용
- 이에 구글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애플과 불균형한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25년 8월에 다시 항소법원에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
- 에픽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유사한 앱 마켓 반독점 소송에서는 다수의 쟁점에서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구글은 애플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원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구글과 애플이 서로 다른 법적 규칙에 따라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그러나 항소법원은 구글이 내세우는 주장이 법원 명령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구글의 요청을 기각
-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글은 법원 결정에 대한 통지문이 발부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명령의 일부 내용을 준수하고, 10개월 이내에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해야 하는 상황

▶ 이로써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의무화하는 법원 명령 집행을 막는 데에 실패

- 구글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며 대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 반면 에픽의 팀 스위니(Tim Sweeney) CEO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번 판결로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

-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앱 배포 등에서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려한 구글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앱 마켓의 독점적 관행 개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분석

[출처]

- Reuters, “US appeals court declines Google bid to further pause Play store overhaul in Epic Games case”, 25.9.13.
- PPC Land, “Google's app store monopoly faces setback as court denies stay request”, 25.9.14.

프랑스, 이용자 동의 없이 쿠키 설정한 쉬인·구글 제재

-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이용자 동의 없이 쿠키를 설정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구글과 중국의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을 제재

▶ '25년 9월 3일 CNIL은 구글과 쉬인이 브라우저에서 광고를 위한 쿠키*를 설정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들 두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

- * 웹사이트 방문 이력을 담아 브라우저로 전송되는 작은 파일로, 인터넷 활동 정보를 담고 있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
- (구글) 구글은 사용자가 구글 계정을 생성할 때 일명 '쿠키 월(cookie wall)*'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CNIL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영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쿠키 설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 쿠키를 허용하지 않으면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
- 또한 CNIL은 구글이 지메일 인박스 아이템들 사이에 광고를 끼워 넣어 5,30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EU의 판례에 따르면 이런 사안은 사용자들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
- 이에 CNIL은 구글에 3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인터넷 쿠키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
 - * 명령 위반 시에는 구글 본사 및 아일랜드 지사에 하루 10만 유로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
- (쉬인) CNIL은 쉬인이 매달 1,200만 명의 프랑스 내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한 쿠키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두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 다만 쉬인은 CNIL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상황

▶ 구글과 쉬인은 이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쉬인은 이미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발표

- 쉬인은 사안의 본질과 자사가 현재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글은 CNIL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 구글은 이전에도 부적절한 쿠키 사용을 이유로 CNIL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
 - * CNIL은 구글에 '20년 1억 유로, '21년 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기술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CNIL의 구글 제재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미국이 유럽의 디지털 규제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프랑스 당국은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단호한 규제 입장을 피력

[출처]

- Politico, "French regulator issues huge Google fine over cookie breaches, risking Trump's ire", 25.9.4.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착취' 규제 강화 방침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은 플랫폼 입점업체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

- ▶ '25년 9월 9일 SAMR 왕추핑(王秋平)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 경쟁과 중소기업 보호는 것은 플랫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임을 발표
- 왕 대변인은 “플랫폼 생태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요금 규칙·기준이 제멋대로인 문제가 나타났고, 플랫폼 내 중소 경영주체의 발전 공간을 제약했다”고 지적
-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공제금·회원비·기술서비스비·홍보비 등은 합리적이지만, 플랫폼이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일방적인 통지 한 마디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안 된다”면서, “업계 전체를 반드시 규범화할 것”이라고 강조
- SAMR은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필요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홍보·마케팅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배타적인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예정으로, SAMR은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26년부터 개발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 한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존의 사업 관행을 대폭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불안감을 표출
- ▶ SAMR은 급성장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론이 확산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그 일환으로 SAMR은 이미 보조금 경쟁으로 정상적인 가격 체계를 교란시켜 논란을 유발한 주요 음식 배달 플랫폼*들을 소환해 ▲법규 준수, ▲불공경 경쟁 지양, ▲악의적인 보조금 경쟁 금지 등을 권고
- * 중국의 배달앱 3사인 엘러머, 메이투안, 징둥닷컴은 배달 및 온라인 쇼핑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가격 전쟁이 이어지자 '25년 대대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하며 정상적인 가격 체계를 교란시킴
- 또한 '25년 8월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의 가격 설정 관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설정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
-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동향이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 '25년 음식 배달 플랫폼 간 보조금 출혈 경쟁 논란 이후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겨냥한 법제도를 더욱 강화해갈 전망

[출처]

- FN Today, “China announces strengthene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vowing to eradicate exploitation of merchants”, 25.9.10.
- Global Times, “China’s market regulator summons food delivery platforms for talks, urges resisting vicious subsidies”, 25.9.9.

미국 법무부, AI 경쟁 촉진 위해 반독점법 집행 강화 방침

- 미국 법무부 차관보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에 따르면 법무부는 AI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

▶ '25년 9월 18일 슬레이터 차관보는 포덤 대학교 경쟁법 연구소(Fordham Competition Law Institute)에서 개최된 국제 반독점법 집행 및 정책 연례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 방향을 설명

- 그녀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AI 국가전략('AI 액션플랜'*)을 언급하면서, AI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을 통해 동 전략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

* 미국의 AI 기술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주도권 강화를 목표로 한 계획('25.7.23. 발표)

- AI 액션플랜은 크게 ▲혁신 ▲인프라 ▲국제외교·안보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슬레이터 차관보는 법무부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
- 그녀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I 시장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

▶ 슬레이터 차관보는 특히 향후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감시할 분야 중 하나로 '데이터 접근성'을 지목

- 그녀는 "AI 산업 내 여러 계층에서의 경쟁 역학과 이들이 상호 연관되는 방식, 특히 데이터 확보와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독점 행위 등은 반독점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역설
- 관련 사례의 하나로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구글에 AI 기업을 포함한 다른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명령('25.9.2.)했음을 언급하면서, 생성형AI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반경쟁적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
- 이와 더불어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기업과 공급업체 간 합병 즉, 수직적 통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과 데이터 계약 조건을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접근이 봉쇄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
- * 공급 체인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이 합병하는 행위로, 생산 및 유통 단계를 통합하여 얻는 비용 절감 효과와 경쟁 업체를 배제하는데 따른 경쟁 제한 효과가 공존
- 또한 오픈소스 AI 모델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그러한 오픈소스 모델을 한 공급업체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슬레이터 차관보는 이번 연설을 통해 법무부가 기존 디지털 시장과 마찬가지로 AI 시장에서도 빅테크 중심의 반경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

[출처]

- Department of Justice, "Assistant Attorney General Gail Slater Delivers Keynote at Fordham Competition Law Institute's 52nd Annu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ntitrust Law and Policy", 25.9.18.
- Reuters, "Google's app store monopoly faces setback as court denies stay request", 25.9.14.

브라질 정부, 새로운 빅테크 반독점법 제안

- 브라질 정부가 경쟁당국인 행정경제방위위원회(CADE)에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감독하고 그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빅테크 반독점법을 제안

▶ '25년 9월 17일 브라질 정부는 의회에 새로운 빅테크 반독점 법안(PL 4675/2025)을 제출

- 동 법안은 디지털 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련성(systemically relevant)* 있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지정해 경쟁 촉진을 위한 행동요건**을 부과하고, CADE에 이러한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감독하고 그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

* 영국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적 시장 지위(SMS)'와 유사한 개념으로, 브라질 내 연 매출 50억 헤알 또는 글로벌 연 매출 500억 헤알 중 하나를 충족하고, 네트워크 효과 등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의 일반적 특성을 가진 경우 '시스템적으로 관련성 있는' 플랫폼으로 지정 가능

** 가격 남용, 검색 결과에서 자사 우대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구사항

- 또한 '킬러 인수'를 막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도입하고, 경쟁사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
- 이를 위해 정부는 CADE 내부에 디지털 시장 감독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
- 브라질은 '22년 EU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 빅테크 규제 법안(PL 2768/2022)을 제안했는데,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이와 달리 포괄적인 규칙을 일괄 부과하는 대신 개별 사안별로 의무를 적용하는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
- 동 법안은 지난 2년 간 정부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의회에서 입법 검토를 거칠 예정
- 한편, 정부는 동 법안에 따라 정부로부터 강화된 감시를 받게 될 기업을 5~10개사로 예상

▶ 일각에서 브라질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빅테크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검열과 규제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쿠데타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 보수론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前)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브라질 내 언론 탄압을 명분으로 브라질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에도 착수
- 그러나 아다지 장관은 동 법안이 수년 전부터 개발되어 왔고 국가의 장기적인 디지털 주권 의제에 기반을 두고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무역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

•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빅테크 반독점법은 DMA보다 영국의 접근법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며, 공공롭게도 브라질과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 발표되어 이목이 집중

[출처]

- Access Partnership, "Brazil Proposes Landmark Antitrust Bill Targeting Big Tech", 25.9.18.

중국,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단

-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이 최근 미국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중단한 반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착수

▶ '25년 9월 18일자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

- 앞서 '25년 2월 중국은 미국 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발표
- 당시 SAMR은 구글에 대한 혐의나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장악 및 구글의 라이선스 관행이 샤오미 등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
- 이후 불과 수개월이 지난 현재 SAMR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철회하기로 결정
- 다만 구글은 아직 반독점 조사 중단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기 불과 수일 전인 '25년 9월 15일 SAMR은 '20년 엔비디아의 7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 테크놀로지 인수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 SAMR은 '20년에 엔비디아와 멜라녹스의 인수합병을 중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고 승인
- 그러나 이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엔비디아에 중국에는 H100 등 최신 AI 칩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고,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맞춰 중국에 판매할 저사양의 중국 전용 칩을 재디자인
- 그러자 SAMR은 '24년 12월부터 엔비디아의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엔비디아가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밝히며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발표
- 또한 최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에 대한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할 것을 통보
-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중국이 주요 규제 대상을 구글에서 엔비디아로 전환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분석
-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구글에 대한 조사 중단 결정이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

• 중국 정부가 미국의 두 기술기업을 두고 엇갈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구글보다는 엔비디아를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출처]

- Reuters, "Beijing drops Google probe, shifting focus to Nvidia in US trade talks, FT reports", 25.9.18.
- euronews, "Nvidia violated antitrust laws, China says, amid trade talks with the US", 25.9.15.